

# “지역차별 국가철도망 구축 전면 재검토해야”

도의회, “비수도·비광역 전북만 완전히 배제당해” 국토부 계획 확정 입장 발표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광역권 없는 전북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도의회는 따르면,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계획에서 전북이 주력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권 독자노선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새만금 등 미래전북 발전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지홍 의장은 “첨단 결과에 정부에 실망이 크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이라는 축적된 과제를 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나 인구나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광역권을 위한 철도망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확정지었다.

이번 계획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전국인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마저 저버린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송 의장은 특히, “이번 4차에는 지방 광역권 철도구축사업에만 12조 원 이상을 확정했는데, 사실상 광역교통망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권에 해당되지 않는 충북, 강원 등은 사업에 포함시키고, 전북만 아예 제외시킨 것은 국가계획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더 이상의 지역차별적 국가계획으로 국토를 통과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고, 불균형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도의회는 전주~김천 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도 제안사업이 추가로 정식 반영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비수도권 중 광역권이 없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신설 등 현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전북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내 국회의원들,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 잇따라

### 신영대 의원, 서군산 축구장 조성 등에 16억원

체육시설 개선 등 군산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에 12억원, 내동중 소재

금강체육공원 재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에 4억원 등이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배정을 통해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 활동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김수홍 의원, 배산공원 명품화 등에 총 13억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시, 기획재정부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13억 원을 확보해 익산시의 숙원 사업 해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수홍 의원은 30일 ▲배산공원 정비사업(8억원), ▲영농농민지원사업(3억원), ▲국민생활관 정비사업(2억원), 총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총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배산공원 정비사업은 익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배산공원을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꽃길 조성, 운동시설 정비, 노후 산책로 안전시설 설치, 신규 산책로 조성 및 아간 LED조명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민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명품공원으로 재탄생한 배산공원에서 환하게 웃는 시민여러분을 조만간 뵙고 싶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한병도 의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에 16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제천, 전북 익산시 을)은 익산시 지역 현안을 해결 할 3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건립 8억, ▲중앙체육공원 리뉴얼 조성사업 6억, ▲하나라도 훈장도로 개선 사업 2억 등 총 16억으로 구성됐다. 이중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건립 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익산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익산시 구석구석 현안을 챙기며,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이용호 의원, 옥정호 에코누리캠퍼스 조성 등 총 40억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역 현안 사업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원시의 경우 ▲순창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민인로 중로 개설 사업으로 각 7억원씩 총 14억원을 확보했다. 순창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열악한 공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민인로 도로정비와 인도 개설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상 기자

임실군에는 ▲옥정호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에 5억 원,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에 8억 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에는 ▲순창 청년형 캠핑 플랫폼 조성사업에 7억 원, ▲순창 유기농산물 복합센터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확보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지자체·행안부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확보한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과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펴 지역주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국민이 만드는 내년도 개정 교육과정 방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토론회 자율·존중·연대 등으로 추구하는 인간상 수정 노동자 시민 관점 포함 노동인권 담보 교육 등 제시



지난달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 토론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달 30일 오후 협의회 회의실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송현정 교수(서울대), 최윤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현이 교사(대전지리산초), 정대수 교육연구사(경남교육정책연구소)가 참여했다. 송현정 교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총론 개정 방안’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자율, 존중, 연대하는 사람 등으로 수정하며, ‘핵심역량에 ‘비판적 사고역량’을 추가해야 하며, ‘인재상을 종래의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비판적 사고와 실천역량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최윤정 연구위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전제교육 필요성과 반영 전략이라는 발제에서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인 요소만을 다루고 있다며, 민중성평등 관점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어, 사회, 도덕 등을 전제교육 핵심반영 교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이 교사는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는 삶으로서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인간상과 핵심역량에 ‘노동자 시민’의 관점이 포함되어야 하며, 노동인권교육을 담보한 진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수 교육연구사는 지구생태시민교육을 위해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교육과정을 현실화하며, 지구생태시민교육 융합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은 구정화 교수(경인교과)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어효진 과장(교육부 민주

시민교육과), 장영일 장학관(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병연 교사(대구다산고)가 토론을 펼쳤다. 한편, 지난 2월 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노동, 평화(통일), 젠더, 기후·환경, 디지털 리터러시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치에 대해 교육현장의 논의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강득구TV, 권인숙TV, 윤영덕TV, 강민정TV에서 생중계했으며,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자료집은 대한민국 교육연구 30주년 누리집(www.nre.kr) 더깊게/교육자치토론회/교육현안토론회/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은성기자



청년 마을 활동 발대식. 지난달 30일 완주군 고산미소시장에서 ‘청년, 지역의 별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1 청년 마을 활동 발대식에 참석한 전행철 행정부장관, 송하진 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15개 청년 마을 대표 등이 완주청년마을을 비밀언덕중개사무소 현판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투자로부터 중요시설 보호

공항·항만·공공기관 등 주변에 투자시 사전 허가 받아야 민주 신영대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법안’ 대표발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허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외국인이 공항·항만, 공공기관, 주요 산업시설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과 항만 원자력발전소처럼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은 정작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건물 거래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할 만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정보 유출이나 테러 공격 등 안보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중요시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호상 기자

지난해 미국은 외국인의 공항 항공, 특정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를 심의 대상에 포함했고, 일본도 법률 제정을 통해 전략적 요충지나 필수기능 시설 인근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제한을 검토하는 등 세계 각국이 부동산 안보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기능이 심각한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서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의 주변 지역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국가 중요시설이나 국가의 핵심기술 정보를 다루는 시설 등에 대해서 안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 석면건축물 관리대상 관리 정보망 공개해야

민주 윤준병 의원 개정 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돼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상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관리대상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19년 이전에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수기로 작성·보관하도록 했으나, 안전관리인의 자발적인 등록 규정으로 인해 수년 전 자료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돼 있는 등 최신 정보의 등록 비율이 매우 낮고, 등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 “농산물 유통시설 종사자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을”

민주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은 지난 29일 공식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가락시장 유통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세에 있으며, 이외 전국 32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가락시장에서는 확진자 수가 5월부터 급증 지난 6월 21일까지 115명이 발생했으며, 작년에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6개월 만에 경기 구리·인양·수원, 인천, 대구, 경북 안동, 광주 등지의 도매시장으로 코로나19 발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8일 이후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가락시장의 경우, 종사자 수만 1만3,000명이며, 유통인구는 8만 명이 넘는다.

또한, 매일 전국 각지의 32,500여명의 농산물 유통 차량이 드나들고 있어, 가락시장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큰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전국 유통물량 중 37%를 차지하는 가락시장의 확진자 급증세가 걱정스럽다. 방치할 경우 농산물 가격 안정과 식재료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이미 농산물 유통 차질로 인한 농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위험의 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농산물 유통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우선접종을 재차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